

‘형사가 순찰’ 형사기동대 부활... “범인 잡는 사람들인데”

형사가 우범지역 순찰 ‘형사기동대’ 부활 일선 경찰서·시도청 수사인력 1300명 차출 “예방보다는 범죄 즉각 대응 초점 맞춰야”

경찰청이 ‘치안 중심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형사기동대를 부활시켜 형사들을 범죄 예방 활동에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흥기 난동 등 강력범죄를 방지한다는 형사기동대 출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순찰보다 ‘범죄 즉각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일선 경찰서 강력팀 600명과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 인력 700명을 차출해 1300여명 규모의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 대)를 꾸린다. 각 시·도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올해 정기인사에 맞춰 형사기동대가 출범될 예정이다.

기존 형사 활동이 사후 검거·수사 위주였다면, 형사기동대는 예방 형사 활동 비중을 높였다.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순찰 인원을 투입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

직범죄·집단범죄 등에도 대응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흥기 난동 등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범죄 예방’ 중심의 형사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기동대는 신설되는 기동순찰대(2600명)와 함께 예방 순찰 업무에 투입된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서는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는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력팀의 주요 업무인 인지기회 수사 기능은 약화하고 지휘 체계 혼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당 필요한 증원이 아니라 그동안 노력한 수사 능력 향상을 불거품으로 만드는 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력범죄수사대 폐지 등은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강력팀 형사들의 순찰 업무가 유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면 조직과 이름, 수사 장소만 바뀌었을 뿐 기존 체제의 재탕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상동기 범죄는 잡힐 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일종의 확실히지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행 동기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준에 있는 인원을 빼서 새로 조직하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형사기동대의 주된 역할이 ‘범죄 예방’보다는 ‘범죄 즉각 대응’에 초점

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동 및 검거, 현행법 체포, 기획수사, 인지수사, 범죄수사 등 범죄 발생 시 이전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형사기동대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범인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순찰을 돌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며 “형사기동대를 구성했다면 범죄 예방 기능보다는 군대의 ‘기동 타격대’ 성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범죄, 조직폭력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출동 및 현행법 체포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형사기동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선욱기자



스케이팅 타며 즐기는 새해 첫 주말
휴일을 즐기고 있다.

새해 첫 주말인 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어린이 및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무신고 수입식품... “싼맛에 먹다간 큰일”

외국식품업소·노점 등 통해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최근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 등을 통해 무신고 외국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특히 외국 식료품업소를 중심으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이 활개를 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식약처의 단속은 정식 수입 통관되지 않은 축산물인 소시지 등 판매 행위도 단속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는 이태원 등 외국인 밀집지역, 도깨비 시장 등에서 주로 외국 식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점(자유업·300㎡ 미만)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로 관리되지 않는다.

이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는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차이가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소(300㎡ 이상)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니들가게(동네수퍼), 식자재 마트 등은 주로 국내 제조·가공 제품이나 식약처에 수입신고 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는 주로 서울 남대문·동대문 시장, 구로시장, 대림시장과 부산 강동시장, 대구 칠성시장, 인천 신포국제시장, 안산 다문화거리 등 지역별 재래·도깨비 시장과 그 주변에 분포해 있다.



도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 보따리상 반입이 용이한 항구 주변과 이태원, 안산, 파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도 많다. 지역별로는 외국인 거주율(등록)이 10% 이상인 서울 용산구,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종로구, 금천구 등과 경기 안산, 파주, 화성, 시흥, 평택, 고양, 김포,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등이다.

국내 법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 시 처벌하고 있다. 무신고, 한글무표시 불법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고발(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해당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게 된다.

임형택기자

마약 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마무리... “위험성 되새겨”

유명인사·일반인 등 7000여명 참여

경찰청은 7일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난해 4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한 ‘NO EXIT’ 마약 근절 온라인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배우 최불암씨를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처의 장·차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학계, 의료계, 경제계, 연예인, 운동선수 등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학생과 외국인을 비롯한 일반인의 참여도 줄을 이어 총 7000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좋아요’ 약 80여만개를 이끌어 냈다.

온라인 외에도 서울역 대합실 대형전광판 영상 송출을 비롯해 대중교통·승강기의 미디

어 보드, 축구장·영화관 스크린 송출, 영수증·컵홀더·약봉투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캠페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호응에 감사드린다”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마약류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은 물론, 예방, 치료, 교육 등을 아우르는 플랫폼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의 암세포인 마약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